

#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①	②	①	③	④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④	①	③	③	①	④	①
21	22	23	24	25					
③	③	②	④	②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3	재무이론	4
정책이론	7	행정환류	1
조직이론	2	지방자치론	3
인사이론	5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5	생소한 문제	8	100점 방지	2
------	----	--------	---	---------	---



실질적인 만점: 92점  
 고득점: 76점 이상  
 분발대상: 56점 이하

▶ 총평

이번 시험은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게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수험생들의 점수가 대폭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절대적인 점수가 낮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잘 봤으면 됩니다.

이번 시험은 72점만 넘어도(76점부터)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고득점한 겁니다. 온갖 지엽적이고 생소한 것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걸 다 대비한 수험생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본인만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나 잘못 공부했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온갖 지엽적이고 생소한 것들을 다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매번 출제됐던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이하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들을 다 맞추고, 기출문제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다 맞추면 넉넉하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합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회독한 수험생들은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었던 '생소한 문제'에서도 기출문제 출제패턴에 따라 정답을 골라내거나 정답이 아닌 것을 소거하여 문제를 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득점 기준이 76점부터인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소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는 해설지의 TIP에도 있고 해설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대비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점수가 아쉬웠던 분들은 꼭 해설 강의를 보고 제가 하라는 그대로 앞으로 대비하면 내년 시험은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13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이론

문 1.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X-비효율성: 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성

<이해용 해설>

- ① (○) 주인-대리인 이론은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며, 경제적 능력을 중시한다.
- ② (×) X-비효율성은 주인-대리인 이론과는 관계 없는 개념으로, 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 ③ (○)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는 주인-대리인 이론은 실제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이 제약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이나 선택한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89번(2018 교행9급)]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065 정책평가의 유형

문 2.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② 정책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 ④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암기용 해설>

- ④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 ▶ **총괄평가(영향평가)**

<이해용 해설>

- ① (○) 평가성 사정이란 본격적인 평가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예비평가이다.
- ② (○), ④ (×) 정책의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효과)**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는 **총괄평가(영향평가)**이다.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중에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③ (○) 모니터링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감시하면서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05번(2018 서울9급)]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Point 112 근무성적평정제도

문 3.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 ②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③ 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암기용 해설>

- ①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 ▶ **관대화 경향 등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 역산식 평정 발생**

<이해용 해설>

- ① (×), ② (○), ④ (○) 강제배분법은 **미리 등급별 성적분포의 비율을 정해 놓는 방법**이다. 이는 점수분포가 과도하게 한 쪽으로 집중되는 **관대화·집중화·엄격화 등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는 피평가자의 성적을 먼저 매기고 성적 순으로 등급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지만, 먼저 등급별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 ③ (○) 강제배분법은 등급별 성적분포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정 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상위등급의 비율을 넘는 인원은 그보다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97번(2019 국가9급, 2019, 2016 서울9급)]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 ④ 강제배분법

[기출에강한행정학 1094번(2012 지방7급)]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042 정책네트워크

문 4.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 ②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④ 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암기용 해설>

- ②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 ▶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경계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상호인지 과정)에 의해 결정

<이해용 해설>

- ① (○) 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 ② (×) 정책네트워크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는 공식기관들보다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상호인지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 ③ (○)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소수 집단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안정성이 가장 높다.**
- ④ (○) **정책커뮤니티(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보다 참여자의 범위가 더 넓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94번(2012 국가7급)]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Point 020 정부와 시장 : 시장실패

문 5.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A: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인데, 넛지이론은 공공선택론이야.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는데, 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C: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지.  
 D: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선택설계자가 되길 바라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Tip>

2023 시험 대비 교재들에 추가된 ‘불의타 대비’의 넛지이론 혹은 ‘2022 지방직7급’에 처음 출제된 넛지이론에 대한 문제의 해설을 참고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참고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쉽게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B, C, D의 넛지이론은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내용인데, A의 넛지이론만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인 공공선택론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

- A: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인데, 넛지이론은 **공공선택론**이야.
- ▶ 넛지이론의 이론적 배경: 행동경제학

<이해용 해설>

- A (×) 공공선택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이고, 넛지이론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경제학**이다.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은 모두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일반적인 경제학(신고전적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 B (○)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고 인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효율성과 고객대응성을 높이려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넛지이론은 **경제적 유인이 없이도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 C (○)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넛지이론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 D (○) 공무원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업가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넛지이론은 공무원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선택설계자**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063 다양한 정책집행 연구

문 6.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
- ③ 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④ 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암기용 해설>

- ③ 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 ▶ 일선관료의 대응방법: 고객(일반시민)의 단순화·정형화

<이해용 해설>

- ① (○)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취하는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이론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하위직 관료이지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② (○) 일선관료는 불충분한(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하고 대립되는 목표(역할) 기대,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부재,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 ③ (×) 일선관료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고객(일반시민)을 단순화·정형화하여 대응한다. 이는 고객(일반시민)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단순화·정형화 된 대응을 하는 것이다.
- ④ (○) 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집행현장의 집행담당 관료를 말한다. 이들이 집행 현장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집행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87번(2018 국가9급, 2013 경찰간부)]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다과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587번 관련틀린선지(2021 경찰승진)]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같은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에 대한 립스키(M.Lipsky)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자인 모든 시민들을 고정관념 없이 불편부당하게 대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Point 071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문 7.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 ②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들 수 있다.
- ③ 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 ④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④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 ▶ 집권화

<이해용 해설>

- ① (○) 상위 계층의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 ② (○) 상위 계층의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집권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문적 기술 활용 및 경비절감이 가능하다.
- ③ (○) 의사결정 권한을 조직의 하위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분권화는 상황 변화에 따라 하위 구성원들이 바로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상위 계층의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집권화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60번(2009 전환특채)]

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상

Point 053 의사결정모형 :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문 8.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책임회피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ㄴ.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ㄷ.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ㄹ.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Tip>

만족모형은 주로 합리모형과 비교되어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ㄴ.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 **만족 기준: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설정**

ㄷ.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 **제한된 합리성 가정: 조직 내 권력적 측면 등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고려**

<이해용 해설>

ㄱ (○), ㄹ (○) 목표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혁신할 수 있는 합리모형과 달리, 만족모형은 주관적인 만족 기준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혁신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ㄴ (×) 목표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합리모형과 달리, 만족모형에서 만족 기준은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이다.

ㄷ (×)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과 달리,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 등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98번(2016 경찰간부)]

정책결정모형 중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행정인은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그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050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과예측

문 9.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③ 지속성(persistence), 규칙성(regularity),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 추세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암기용 해설>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 **교차영향분석: 직관적 예측**

<이해용 해설>

① (○), ③ (○), ④ (○)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중 연장적(추세연장) 예측기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시계열 자료)를 연장하여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계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존 추세의 지속성과 규칙성이 있다는 전제로 한다.

② (×) 교차영향분석은 직관적 예측기법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53번(2022 국회8급, 2013, 2011 국회9급)]

W.N.Dunn은 예측의 기법을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보기>에서 이론적 예측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ㄸ. 교차영향분석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Point 091 리더십 : 리더십 연구의 발달

문 10.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켈리(Kelley)는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s), 순응적 추종자(sheep), 수동적 추종자(yes people),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s) 등 네 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 ㄴ.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team management)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 ㄷ. 상황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장자 중 하나인 피들러(Fiedler)는 리더-구성원 관계, 직무구조, 직위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요소로 설정하였다.
-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 주도과 배려를 갖춘 균형잡힌 리더형태로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90번(2021 경찰간부, 2017 지방7급)]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891번(2017 국가(추)7급)]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Tip>

생소한 이론도 섞여 있지만,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에 있었던, 선지 ㄴ, ㄹ을 바로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ㄱ. 켈리(Kelley)는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s), 순응적 추종자(sheep), 수동적 추종자(yes people),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s) 등 네 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 켈리의 팔로워십 모형: 수동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 주도과 배려를 갖춘 균형잡힌 리더형태로 보았다.

▶ 오하이오 주립대학: 구조설정(구조 주도)과 배려 수준이 모두 높은 리더가 가장 효과적

<이해용 해설>

ㄱ (X) 켈리(Kelley)의 팔로워십 모형은 리더에 대한 팔로워들의 참여 방식과 사고 방식에 따라 팔로워십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 중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고 의존적·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수동적 추종자가 리더십 발휘에서 가장 위험한 팔로워라고 본다.

ㄴ (O)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유형도는 리더의 행태를 생산(업무지향적)과 인간(직원지향적)으로 나누고 양자에 관한 관심이 모두 높은 팀형성형(단합형)을 가장 효과적인 리더라고 주장한다.

ㄷ (O)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은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구성원)의 관계, 과업(직무)구조, 리더의 지위권력(직위권력)을 설정한다.

ㄹ (X)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구조설정(구조 주도)과 배려의 수준이 모두 높은 리더가 가장 효과적인 리더라고 주장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142 예산심의

문 11.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의·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 ▶ 국회: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거부 불가(일부 수정 가능)

<이해용 해설>

- ④ (X)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수정만 가능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392번(2022 경찰간부, 2014 서울7급)]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393번(2020 경찰승진, 2011 전관특채)]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바른 것은?

- ② 법률은 공포절차 없이 효력 발생이 가능하나 예산은 정부의 공포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

Point 045 정책의제설정의 유형

문 12. 행정 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②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 ③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 ④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④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
- ▶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형성

<이해용 해설>

- ① (O), ② (O), ④ (X) 공공(행정) PR(Public Relation)은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호의적 반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행정) PR은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필요해진 것이며,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공공(행정) PR의 객관성을 저해한다.
- ③ (O)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공공(행정) PR를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82번(2012 경찰승진, 2005 광주9급)]

정부는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으로 대두된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PR(Public Relation)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행정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Point 114 신분보장의 제한

문 13.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 대해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 ③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암기용 해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 ▶ 파면: 퇴직급여 감액
- ③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 ▶ 감봉: 직무정지는 없음

<이해용 해설>

- ① (○)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 파면은 중징계 중 하나이며,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연금급여)가 감액된다.
- ③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④ (×) 감봉은 경징계 중 하나이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감봉에는 **직무정지는 없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25번(2011 국가9급)]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128번(2018 국가9급)]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Point 16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문 14.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②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암기용 해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단체위임사무: 지방의회의 관여 가능

<이해용 해설>

- ① (○) 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포괄(내포)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 엘코크(Elcock)의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자율성이 제약되고** 중앙의 감독에 따라 국가정책을 집행한다고 본다.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만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634번(2014 국가9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대상이 아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Point 125 현대적 예산원칙

문 15.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는?

- ① 재정준칙
- ② 총액계상
- ③ 총사업비관리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

<Tip>

재정준칙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출제된 겁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선지 ②, ③, ④를 소거하여 풀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재정준칙
- ▶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음

<이해용 해설>

① (X) 재정준칙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Point 062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문 16.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 ②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 ③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암기용 해설>

- ③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상향적 접근

<이해용 해설>

- ① (O), ② (O)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은 하향적 접근이다. 이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타당한 인과모형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이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③ (X), ④ (O) 결정된 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보는 하향적 접근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책(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기 용이한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81번(2015 행정사)]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110 임용의 유형

문 17.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ㄴ.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ㄷ.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 ㄹ.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Tip>

선지 ㄱ은 2023 시험 대비 교재들의 ‘불의타 대비’로 대비한 내용입니다. 물론 ‘불의타 대비’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내용이니, “시간과 여력이 되면” 시험 직전에 ‘불의타 대비’도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선지들도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강의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니 앞으로 점점 맞추게 될 겁니다.

<암기용 해설>

- 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 **공무원직장협의회**: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
- ㄷ.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처분청을 기속

<이해용 해설>

- ㄱ (X)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경우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ㄴ (O) 휴직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이 원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ㄷ (X)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소청인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ㄹ (O) 시보임용 기간에는 정규공무원과 달리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Point 126 우리나라의 예산규범

문 18.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 ②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 ③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 ④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Tip>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생소한 문제이지만, 제가 국가채무 포함 및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채무 “제외” 대상을 암기하는 요령을 모든 강의에서 배웠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도 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건 출제됩니다. 모든 것을 다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제가 대비하라고 하는 건 대비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 ▶ **회계 및 기금이 발행한 채권**: 국가채무에 포함

<이해용 해설>

- ① (X) 국가채무 중 금전채무에는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다.
- ② (O)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4종류가 있다.
- ③ (O) 국가채무를 자금의 융통을 위한 금융성 채무와 재원이 부족하여 빚을 지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122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문 19.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Tip>

선지 ④에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굳이 다른 주식으로 변경할 이유는 없겠죠? 그저 강제로 팔도록 하거나 사고 팔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④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 ▶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해용 해설>

- ④ (X) 주식의 백지신탁은 공무원이 보유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100점 방지]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122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문 20.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 ④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Tip>

'재산등록'에 관한 지나치게 지엽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암기가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암기용 해설>

- ②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제외
-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 ▶ 재산등록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④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 ▶ 대학교 학장: 재산등록 의무자(재산공개 의무자가 아님)

<이해용 해설>

- ② (X)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제외한다.
- ③ (X)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 ④ (X)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이고, 재산공개 의무자는 아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Point 15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문 2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Tip>**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생소한 문제이지만, 선지 ②는 개정법령 예상문제로 모든 강의에서 대비한 내용이고, 선지 ④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무엇이든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요령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회독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의 출제패턴상 선지 ①보다는 선지 ③이 틀린 선지로 바뀌어서 내기 좋은 패턴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겁니다.

선지 ③은 ‘불의타 대비’에 있는 내용이지만, 미처 암기하지 못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③ 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 정례회: 매년 2회

**<이해용 해설>**

③ (X)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Point 126 우리나라의 예산규범**

문 22. 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Tip>**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생소한 문제이지만, 2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충분히 회독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의 출제패턴상 선지 ③의 “제외한” 부분 외에는 틀린 선지로 바뀌어서 널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겁니다.

**<암기용 해설>**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모두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공표

**<이해용 해설>**

③ (X)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모두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022 정부와 시민사회 : 시민참여

문 23. 정부신뢰 및 시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이다.
-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 ㄷ.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사례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Tip>

선지 ㄱ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선지 ㄷ은 ‘불의타 대비’에서 ‘공론조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내용입니다. 물론 후자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내용이지만, 공부기간이 늘어날수록 선지 ㄱ, ㄷ은 옳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선지 ㄴ은 매우 생소한 이론이니, 대비하지도 못했고 OX를 판단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암기용 해설>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 상호적 신뢰

<이해용 해설>

ㄴ (X) 정부와 시민 간 신뢰의 유형 중 양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한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상호적 신뢰라고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비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신탁적 신뢰라고 한다.

ㄷ (O) 다수결에 의한 선호집합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 답론을 통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공론 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조사방법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00점 방지] 중요도 C, 난이도 상

Point 168 의존재원

문 2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②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Tip>

선지 ②, ③, ④는 지나치게 출제범위가 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선지 ②, ③은 옳다는 것만 확인하고, 선지 ④는 ‘지역상생’이니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름풀이 연습’만 해보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

<이해용 해설>

- ① (O)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용도의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 ④ (X)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소비가 월등하게 많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Point 15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문 25.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ICT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 ① 혼합현실(mixed reality)
- ②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③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④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암기용 해설>

②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처리 과정·절차의 근본적인 재설계

<이해용 해설>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과정·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업무과정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이라고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1532번(2017 지방7급)]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B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구조, 기술, 형태** 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④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